

2014. 3. 10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3
2. 8차 협정보다 개악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	5
3. 협정 기간 5년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	9
4. 미국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11
5.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	14
6.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20
7.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22
8. 법적 근거 없는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 운용	24
9. 국회 권한 침해하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늑장 제출	26
10.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하도록 해야	27
11.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31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정부가 미국과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함. 그 주요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임.

정부는 이른바 '제도개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나 국회의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음. 특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이 삭제된 것은 8차 협정에 비해 개악된 부분임.

이에 국회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함.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미측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자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빼돌려 축적한 금액이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이었고, 2013년 8월 현재 7100억원임.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실제 편성액의 차액 합계(감액분)가 3035억원임. 한미당국이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분 이월액이 1890억원이고, 불용액 합계도 572억원에 이름. 여기에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에서 발생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추정액을 합치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관련 자금은 무려 1조5천억원이 넘음.

박근혜 정부는 협상 초기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이유가 생겼다면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 당정 협의 뒤 방위비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5.8%)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음. 이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 7360억원에 비해 무려

25%가 늘어난 것임.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감액분까지 9차 협정 기간에 부담한다면 우리는 매년 평균 6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2. 8차 협정보다 개악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

1) 현물지원 88% 규정 전면 삭제

정부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8~2013년) 체결 당시, 군사건설비를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88%까지)으로 연차적으로 전환기로 한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운 바 있음.

정부는 이번 9차 협정에서도 현물지원 88%는 당연하다고 주장. 그러나 8차 협정에는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는 규정이 있고, 교환각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9차 협정과 ‘군사건설 이행 교환각서’에는 “현물지원 88%” 규정이 전혀 없음. 100% 현금지원한다해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음.

정부가 ‘설계 및 감리비 12%’ 규정(6항)을 근거로 현물지원 88%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시공비와는 관계없는 규정임. 9항의 현물지원 절차 규정도 8차 협정에 딸린 현물지원 교환각서에 명시됐던 ‘현물지원 88%’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9차 협정에 남아있는 문항으로는 현물지원을 보장할 수 없음. 8차 협정에 딸린 교환각서의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에도 자동 연장된다는 주장도 8차 협정과 9차 협정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협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고 시한을 명시하고 있어서 2014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9차 협정에서 현물지원 88%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군사건설비 상당액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될 수 밖에 없음. 이는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을 8차 협정 이전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임.

<표 1>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물지원 조항 비교

		8차 협정 관련 조항	9차 협정 관련 조항	문제점
본 협정	제 3 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설계감리비 제외 전액 현물 지원 규정 삭제되어 현금 지원 확대 가능

		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교 환 각 서	제 목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현물지원 교환각서의 의미 상실 (현금지원 포함 전제된 교환각서)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계감리비 12% 규정은 현물지원 규정과 관계없음
	9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88% 현물지원 명시조항 삭제 이행약정 체결 의무조항 아님

2) 현금지원 부활 이유 : 미측 부담 C4I 시설 현금지원 가능성

C4I(지휘통제정보체계) 문제는 2003~2004년 한미 간 미군기지이전 협상 때부터 문제가 된 사항. 당시 C4I구축비용에만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에 한미당국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한측의 C4I비용부담을 제한하고 주한미군의 C4I(CENTRIXS-K)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조항을 자세히 규정.

그러나 미국은 미군기지이전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주한미군 C4I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측에 C4I비용부담을 요구함.(연합뉴스, 2004. 10. 18) 2007년 3월 20일,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MP검토결과 발표 자리에서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를 거론하며 “이 4가지는 아직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고, 조건부로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힘.(통일뉴스, 2007. 3. 20) 미측의 점증하는 요구에 따라 2010년말에도 C4I 등의 한미 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못함.(내일신문, 2010. 12. 15)

<표 2> C4I 비용 증가 추이

	한국부담	미국부담	총액
2003. 6.	202억원		
2004. 4. (IMP)	480억원		
2006. (중간MP)	3,816억원		
2007.	2,150억원		
2008. 8. (PMC중간보고)	3억6,300만 달러 (5,245억원)	3억9,300만달러	7억5,600만달러
2008. 10. 15.	2억7,800만 달러 (4,017억원)	3억7,400만달러	6억5,200만달러

(한국일보 “용산기지 지휘통제시설 이전비 ‘고무줄’”, 2008. 10. 24)

한편, C4I비용은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표 2> 참조)

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측 입장에서는 4억 달러에 가까운 주한미군 C4I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움.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을 한국인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 때, 미측이 보유한 현금 미 집행액은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¹ 이

1 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2013. 10. 22쪽

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분에서도 미측이 부담해야 할 특수정보시설(C4I) 비용을 충당할 것이 확실시 됨.

미측이 C4I시설을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건설과정에서 특수정보시설의 보안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C4I시설만큼은 한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직접 짓겠다는 것임.

3)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시설 건설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에는 C4I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제공, 기존 장비 이전, 900만불 이내의 장비 교체를 규정하고 있음.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C4I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한미군사를 위한 C4I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협정에 따른 우리측 부담분 외에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

2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 증 필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로서는 협정기간이 짧아야 부담을 덜 수 있음. 그런데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 대구, 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연합뉴스 2014. 1. 12)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음.

그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군사건설비 누계 1조5727억원 중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축적한 자금은 1조1193억원으로, 나머지 4534억원은 기존 미군기지에 투입되었음. 2013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에도 오산, 포항, 군산기지의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잔여사업으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방위비분담협정 항목 중 하나인 ‘군수지원비’에도 기존 미군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소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2012년의 경우 274억원의 시설유지비가 편성되기도 했음. 이처럼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항목으로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관련 예산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총액 중 군사건설비 비중을 대폭 확대했음.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1041억원(21.3%)이었던 군사건설비는 2013년에 3850억원(44.3%)으로 늘었음. 액수로는 4배 가까이 늘었고, 비율로는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기존 주한미군기지에 군사건설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12년도의 경우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4100만 달러, 대구의 캠프 헨리에 48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음.³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한미당국의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투입되었는데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협정기간 5년 동안 방위비분담금 전체 예산 중 군사건설비 배정이 2013년의 44.3% 정도의 비율로 이뤄진다면 2017년과 2018년의 군사건설비 합계는 9천억원에 육박함.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막대한 자금이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3 『H.R. 1540(112th):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p. 403

<표 4> 9차 협정 기간 중 방위비분담금 총액 및 군사건설비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군사건설비 추정액 (2012년과 2013년 군사건설비 비율 44.3% 적용)
2014년	9,200 (한미 간 합의액)	4,076
2015년	9,320 (2013년 물가상승률 1.3%, 확정액)	4,129
2016년	9,534 (기재부 2014년 예상 물가상승률 2.3% ⁴ , 추정액)	4,224
2017년	9,791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337
2018년	10,055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454
계	47,900	21,220
평균	9,580	4,240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협정기간 5년을 고집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함. 즉,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건설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곤했던 8억8460달러(2013. 7. 30,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 발언⁵)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지휘통제정보체계(C4I) 구축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미국은 최첨단 주한미군기지를 사실상 거저 얻게 되는 것임.

4 “올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망”(뉴시스 2014. 1. 9)

5 <민중의소리> 2013. 8. 21

4. 미국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1) 한미당국, 그 동안 부인하던 이자소득 인정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당국이 9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함. 지난 7년 동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끈질기게 정부, 국회, 법원,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이 십수년 동안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임.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입수한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커뮤니티 뱅크와의 금융거래 자료는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음.⁶ 이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자소득은 최소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2) 이자소득은 영리행위 금지한 한미SOFA 위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빼돌려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임. 주한미군의 영리활동은 ‘한미SOFA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⁷에 위배됨. 육군본부의 행정협정 해설서는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6 자세한 내용은 <통일뉴스> 2013. 11. 20. “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08> 참조

7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한미소파 7조)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⁸

3) 이자소득의 주체는 커뮤니티 뱅크가 아니라 미국 정부

그런데 한미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정부(주한미군)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주체도 미국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반면,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어 해외미군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이자소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도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라고 밝혀 이자소득을 얻은 주체는 미국정부이며 커뮤니티 뱅크는 이자소득의 중계자일 뿐임을 명시하고 있음.

4)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제2의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이후 정부관계자는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이 커뮤니티 뱅크를 미 국방부 소속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미국 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SOFA상 법적 지위는 초청계약자임. “초청계약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공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 본토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와 협의해 SOFA상 초청계약

8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61쪽

자로서 지정하게 된다.……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노동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2001. 4, 10~11쪽) 즉,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군사은행인 것임.

한미당국이 커뮤니티 뱅크를 ‘사기업’이라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은행이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임. 즉, 한국인 혈세로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려는 것임. 이는 한미양국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는다는 제2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5) 세금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이자소득에 면죄부 주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축소·왜곡하려 하고 있음. 만약 이 사안이 미국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정부가 얻은 이자소득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임.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이 정당화됨.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됨.

국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얼마씩 불법 축적했는지, ▲축적된 자금으로 매년 얼마의 이자소득을 올렸는지, ▲이자소득을 누가 최종적으로 수취했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함.

5.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LPP협정 개정 시 새로이 포함된 미2사단 주력부대인 동두천의 캠프 캐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강조 필자)의 대체시설자금지원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LPP 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것임.

<표 5>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LPP협정 개정사항¹³

구분	반 환 기 지	반 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현행 ⁹	개정안 ¹⁰	
서울	택시 에넥스	'02	'03	불필요
	캠프 킴	'05	'08	대한민국
	캠프 그레이	'06	'06	미국
의정부	캠프 라파디아	'06	'06	미국
	캠프 에세이온	'10	'08	미국
	캠프 홀링워터	'10	'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07	'08	미국
	캠프 시어즈	'11	'06	미국
파주	캠프 하우스	'06	'05	미국
	캠프 스탠턴	'07	'05	미국
	캠프 에드워즈	'07	'05	미국
	캠프 게리오웬	'08	'05	미국
	캠프 자이언트	'11	'05	미국
	캠프 그리브스	'11	'05	미국
동두천	H220	'08	'08	대한민국
	캠프 님블	'11	'08	대한민국
오산	오산공군(베타사우스)	'02.10	'03	불요
	오산공군(알파사이트)	'08	'08	미국
김포	김포 우편시설	'05	'05	미국
하남	캠프 콜번	'08	'07	미국
원주	캠프 이글	'11	'08	미국
	캠프 룡	'11	08	미국
인천	캠프 마켓	'08	'08	대한민국
춘천	캠프 페이지	'11	'05	대한민국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포항과전대	'11	'11	미국
대구	캠프워커(H-805)	'07	'06	대한민국
부산	캠프 하야리아	'11	'05 목표	불필요
	부산 DRMO	'05 6월	'05	대한민국
동두천 ¹¹	캠프 캐슬		'06	미국
	캠프 케이시		양국의 지도부간 합의하에 결정	미국
	캠프 호비			미국
의정부 ¹²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국
	캠프 스탠리			미국
	캠프 잭슨		'08	미국

9 2002년 LPP협정(필자 주)

10 2004년 LPP개정협정(필자 주)

11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동두천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2)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LPP협상 초기에 미측은 LPP사업과 방위비분담금의 연계를 거부한 바 있음. “지난 ‘01년 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 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¹⁴ 는 기록이 이를 입증함.

국회예산정책처는 “SMA 비준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사업항목이 명시된 SMA 를 동의한 것이므로, 비록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주체가 미국일지라도 한국의 동의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분담금 집행행위는 SMA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¹⁵ 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LPP사용) 사용이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SM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여기서 “한국의 동의와 승인”이라 함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양해’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임.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임.

3) 국가재정법 위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예산에 속한다. 그런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 프로그램을 넘어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¹⁶ 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이 국가재정법 제45조

12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의정부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13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2004. 11, 14쪽.

14 이석중(육군 대령). <방위비 분담 협상방안>.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4.

15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16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¹⁷ 임.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200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조1193억원이 불법 축적되었고, 2013년 8월 현재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축적액이 7100억원임.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경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조 위반임.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사업비를 그 해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압박이 초래된 것임.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6조 4항의 공개성의 원칙¹⁸ 도 위반한 것임.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적 전용을 국민 몰래 미국에 ‘양해’해 주었고 이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겨왔으며 마치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왔기 때문임.

4) 국회 의결 무시 및 국회법 침해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음. 이어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음.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17 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23쪽

18 “예산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공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재정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1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도 국회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였고 미사용액 우선집행 등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음. 이는 국회 의결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한 것임.¹⁹

5) 헌법 위반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임.

6)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어기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것임. 그러나 미2사단 이전은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 근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19 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고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은 다만 시설과 구역의 제공 책임만 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지제공 이외에 미군의 운영유지비(이전비용)를 LPP협정과 용산협정을 통해서 부담키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음.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이러한 원칙이 약소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한국민을 기만한 협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6.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음.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월 31일,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²⁰ 고 주장했음. 외교통상부는 2009년 2월, <국회 외통부 보좌관 대상 설명자료>에서 “2007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분담금의 LPP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지난 ‘01년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는 기록은 이른바 ‘2000년의 양해’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으로, 그런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함. 또한 2002년의 “양국 국방 당국 간 합의” 주장에 대한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외교부는 “2000년 LPP 사업 구상 설명시 미측은 자체 예산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동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측에 제안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양해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음. 또, “2004년 합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003-4년 LPP 협정 개정 협상 당시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에 대한 우리측의 양해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음. 이상희 전 국방장관도 2008년 11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간 양해가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²¹ 다고 실토한 바 있음.

정부의 이 같은 답변은 한미 간 양해 또는 합의라는 것이 한결같이 조약 체결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한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줌.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과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이자 LPP개정협정의 핵심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임. 따라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정부

20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2008. 10. 31.

21 제278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2008. 11. 21., 52~53쪽.

간 합의라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LPP개정협정의 위상 및 법적 형식과 동일한 수준인 한미 간 정식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항임. 그러나 이 합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합의 또는 양해는 LPP개정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임. 따라서 한국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해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님.

7.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평통사는 2009년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 부담할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8년 10월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간 기지이전비용 분담 비율이 94.2%(15조6928억원) : 5.8%(9750억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²²

<표 6>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항 목	한국정부 주장	부담국	실제부담 예상액	부담액(비율)
건설비	7조 5천억원	미국	9,750억원	9,750억원 (5.8%)
	5조 8천억원	한국	방위비분담금 + 민간투자 임대주택 건설비 = 6조 5,250억원	15조 6,928억원 (94.2%)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		5조 8천억원	
평택지원비 환경치유비 SOC	2조 3,573억원		1조 105억원	
			2조 3,573억원	

그런데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공개한 미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2007년 4월 2일 작성된 미 대사관의 3급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²³

22 유영재,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 2. 24, 71~73쪽.

23 <프레시안> 2011. 9. 28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3년 7월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²⁴ 이라고 밝혔음.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그러나 정부는 2004년 기지이전협상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여,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국회는 정부의 이런 주장을 믿고 기지이전협정을 비준 동의해 주었음.

정부는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을 밝힐 때까지 이를 숨겨왔음. 위의 비밀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부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임.

정부는 자신들이 숨겨오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점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한미당국이 이를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음. 정부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이 모두 얼마인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음.

24 <민중의소리> 2013. 8. 21

8. 법적 근거 없는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 운용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등 미집행액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미간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한 결과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현재 (군사시설개선비) 집행률이 33.7%에 불과하여 1,500억원 이상의 이월이 예상”²⁵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처럼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에 대해 국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아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이 무시되고 있음.

<표 7> 제8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미지원액 규모²⁶

(단위 : 억원)

구 분	이월액('13년)*	불용액('09~'13년)	감액편성액('09~'13년)	계
군사건설	1,488	451	2,735	4,674
군수비용	402	121	300	823
계	1,890	572	3,035	5,497

※ 이월액은 다음 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어 누적분이 없어 2013년도 이월금액만 표기함.

1) 감액분은 8차 협정 종료 이후 지급 의무 없어

감액된 예산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2013. 6. 14)에서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제1조는 “주한미군사는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정액을 국방부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고, ‘이행약정’2조 나(군사건설비)는 “현물군사건설

25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 2013. 11, 346쪽.

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14. 2, 19쪽.

개별사업은 한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정 및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군사건설사업의 수립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감액 배정과 그로 인한 책임은 미측(주한미군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된 방위비분담금을 협정 종료 이후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임.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8차 협정에 따른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종료됨.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르더라도 협정이 종료된 이후 감액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분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임.

2) 방위비분담금 이월은 국가재정법 위반

이월액과 관련하여 8차 특별협정(3조)과 그 부속합의서인 교환각서(8조)는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군사건설)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라고 되어있음. 뿐만 아니라 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협정 종료 이후에도 8차 협정에 따른 군사건설비의 계속 집행을 보장하고 있음.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배하고 예산의 기본원칙인 단연도 예산주의를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로 우리의 재정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임. 이월액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군사건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제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군사건설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고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불용액을 미측에 다시 제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불용액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국고귀속이 원칙이지만 방위비분담금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군사건설비의 경우 미군에게 다시 지불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음.

9. 국회 권한 침해하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억장 제출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향후에는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함. 이 같은 부대의견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달린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1개월이 넘는 2014년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함. 그리고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정부가 국회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협정안을 상습적으로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의심됨. 정부는 심지어 2월 임시국회 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음.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억장 제출해놓고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가 그토록 노동자들을 생각했다면 협상기간을 앞당기거나 1조5천억원이나 남아 있는 군사건설비 축적 관련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 국회를 협박할 일이 아님. 정부는 미집행금도 용도가 결정되어 있어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항목과 용도가 전혀 다른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12년 전인 2002년부터 매년도의 미집행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10.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하도록 해야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에 대한 국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9차 협정에서도 그 불법·부당성을 시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 부분은 오히려 개악되었음. 따라서 국회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공청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부당성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함.

1)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 핵위협 증대에 따른 주한미군대비 태세 강화’나 ‘미 국방예산 자동삭감’ 등을 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였음. 하지만 이른바 ‘북한 핵위협’은 본질적으로 남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공격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미 국방예산 삭감문제 또한 과도한 전쟁비용 지출 등 미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써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님. 우리 정부조차도 B2와 B5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파견은 주둔비용과 개념적으로 다르며 주둔비용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그런데도 대폭 증액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압력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 “최근 급박해진 안보상황을 감안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한국일보 2014. 1. 13)는 외교당국자의 설명은 이를 방증함.

따라서 국회는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폭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함.

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를 명시해야

군사건설비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원천이고, 불법 부당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 또한 감액 편성과 고질적인 이월을 야기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핵

심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함. 이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임.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중 군수지원비의 한 항목으로 기존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설정되어 있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기존기지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자체 예산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기지 시설 개량과 건설은 가능함.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및 C4I비용 등으로 전용되는 것도 막아야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 전의원은 "한미당국이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27 고 폭로했음.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07년 4월 2일 본국에 보낸 3급비밀 전문에서 "한국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28 버시바우 대사가 민간투자 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판단한 것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임.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소요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도록 되어 있음.29 또, 미2

27 연합뉴스, 문화일보 2005. 5. 26

28 프레시안 2011. 9. 28.

29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 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사단 가족주택 임대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함.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는 지급대상에 제외되어 있음.³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9차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부담분과는 별도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 규모의 지휘통제정보체계(C4I) 구축에 쓰일 가능성도 높음.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C4I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가 전협정 위반이므로 이들 용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함.

4) 감액분을 지급하지 말아야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감액분)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미측의 책임임.

감액분 지급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런데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이에 대해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LPP 전용을 위해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우선 반영해야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운용과정에서 감액분 외에도 5천억원이 넘는 이월액, 불용액,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30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2항 다. 군수비용 분담.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로 지급된다. 한국 국방부는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의거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탄약의 저장 및 정비, 수송, 장비의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대료, 주한미군시설의 유지비용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국회의 합리적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했음.

따라서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시킴으로써 정부가 이 자금을 환수하거나 협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함.

6)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3년간 임금동결에 대량감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 안정 보장, 임금 인상, 인건비 분야 철저 검토 및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고용조건에 대한 정부간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음.

9차 협정에 딸린 ‘제도개선 교환각서’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규정이 있음. 이 같은 규정은 선언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어서 주한미군노조의 핵심적 요구와 거리가 멀.

방위비분담금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근절하고 주한미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야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은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의 전횡을 계속 허용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협정 기간을 1년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함.

11.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1) 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를 초과하여 이미 65% 이상을 부담³¹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한국 부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는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함.

한미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NPSC의 65.1%의 부담을 하고 있음.

저평가·누락분까지 따지면 한국의 비인적 주둔비부담 비율은 최소 70%를 넘음.

<표 8>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한·미 간 부담 비율(2010년 기준)

	계	내역	출처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7억7330만달러 (34.9%) (8939억원)	-운영유지비: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군사건설비:8280만달러	미 국방예산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 람(2011. 2.) ³²
한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4억4489만달러 (65.1%) (1조6749억원)	-직접지원비:8561억원 (미군주둔비부담금 7904억원 등) -간접지원비:8188억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등)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 (박주선의원실 제공)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계	22억1819만달러(100%) (2조5688억원)		
비고	국가통계포털 2010년 평균환율 1달러당 1156원		

31 자세한 내용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2013.

6. 19. 참조.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open_content&cwr_id=44

2)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돼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는 7조4524억원에서 34조6351억원(일반회계)으로 4.6배 늘어난데 비해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8695억원으로 8.1배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이 국방비 증액을 이끈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말해줌.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당국이 축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잔액이 1조3천억원이 넘고, 미군이 축적한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데도 우리는 향후 5년간에 걸쳐 5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함.

3)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집행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발행한 「동맹국의 미군 지원비와 미국의 비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³²에서 한국 등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1천40만 달러(116억4280만원, 1달러당 1119원)에 달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미2사단을 위한 박물관이나 140만 달러(15억6660만원)에 달하는 용산미군 기지를 위한 식당시설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돈(free money)”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음. 평택 미군기지에 50억 원짜리 제과 제빵공장을 신축하려다가 미 의회의 제지로 중단되기도 하였음.

보고서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 의회는 한국이 지불하는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조차 자국 납세자의 부담을 걱정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며 우리 국민 혈세의 집행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미 간 군수분야 시행합의서’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있는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 회사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PAE Korea’에 맡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6억원의 부담

32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12 BUDGET ESTIMATES』, February 2011, p.208.

33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2013. 4. 15, p. 23~24.

이득을 안긴 사례도 있음.³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11억 원을 영리 목적의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적으로 돌려쓰다가 적발된 사실이 2008년 2월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도 있음.³⁵

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조차 2012년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 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음.³⁶

이는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의해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4)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 건설을 저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만 하더라도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무려 10조4184억 원을 부담하였음. 이는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92억 달러³⁷ (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를 넘는 금액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직간접지원(미군기지 무상 임대, 카투사 지원 등)을 하고 있음.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추 수 있었을 것임.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된 것임.

5) 방위비분담 협정 자체가 SOFA에 위배되는 불법

한미SOFA 제5조는 한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2항)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1항)하고 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나눴으로써 부담의 균형을 기하자는 취지임.

34 박기학,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미군, 뻔뻔하다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②] 방위비분담 왜 문제인가?, 오마이뉴스, 2013. 6. 19.

3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영내 호텔 인건비로 사용”, 경향신문, 2011. 10. 11

36 “국방부, ‘남아도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남수단 파병에 전용”, 민중의소리, 2013. 8. 19

37 권현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2011년 8월)

그런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³⁸ 등으로 한미SOFA 제5조 1항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특별조치’ 협정임. 그러나 8차 특별협정 전문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언급이 있을 뿐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5조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의 특별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또는 근거가 없는 것임.

이처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시설과 구역’ 제공 이외에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미소파 5조의 취지에 역행하여 한국(주둔국)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임.

6)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 무상제공뿐만 아니라 주둔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

우리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 준다는 명분 때문(한미상호방위조약)임.

그런데 현재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방어 임무만 담당하는 불박이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바뀌었음.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임무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미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것임.

따라서 대북 방어 임무,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임.

7)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미2사단 한강 이북 잔류 추진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연합뉴스, 2013. 11.

38 “당시 한국의 협상 실무진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결국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압력이었다.”(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12, 91 쪽)

25)고 밝힘.

우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정을 위배하여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의 커다란 희생과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 속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후반부에 이른 시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2사단 일부의 한강 이북 잔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임. 특히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주거권과 환경권, 개발권에 제약을 받아오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학수고대해 온 동두천 등 한강 이북지역 주민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 우리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종료되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런 구상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시퀘스터(미 연방예산 자동삭감제도)에 따른 미지상군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미국이 우리를 봉으로 여기면서 한미 간에 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사안을 제멋대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유지'강화라는 이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8) 패전국 일본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³⁹

전 세계에서 특별협정(SMA)을 통해 미군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패전국 일본 밖에 없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불평등한 협정을 맺고 있음.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제1조는 "대한민국은.....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

<표 9>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교

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한국이 지원하는 미군주둔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런 조항 자체가 없음.

우리의 경우, 지원 항목이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의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군사

39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한국이 태평양 미군운영비까지 부담?" 2013. 6. 26 참조

특별협정의 내용	 한국	 일본
미군주둔경비 지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제1조)	관련 규정 없음
지원대상사업	인건비, 군사건설사업, 군수지원사업 등처럼 사업대상도 포괄적으로 규정됨 (제1조)	인건비, 광열수도비, 훈련이전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특정되어 있음
분담금 총액 규정	연도별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이 정해져 있음(제2조)	일본 정부가 매회계연도마다 총액을 결정해 미국에 통보
다음연도 이월문제	현물군사건설사업의 미집행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제3조)	관련 규정 없음

© 오마이뉴스 고정미

건설이나 군수지원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임. 반면 일본의 경우 제1조(인건비), 제2조(광열수도비), 제3조(훈련이전비)처럼 각각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적시하고 있음. 즉,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가령 군사건설 사업을 이것저것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협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우리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총액을 연도별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일본의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미국에 대해 신속히 통보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지원 금액 총액의 결정권한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이월시킨다거나 축적한다거나 전용하는 등 집행을 불투명하게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음.

또 한국은 일본과 달리 카투사(2012년 3400명)나 한국노무단(2012년 2000여 명이며 한미 소파가 아닌 전시협정 성격의 한국노무단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 근로자)과 같은, 사실상 미군을 직접 대체하는 인력지원을 하고 있음.

9)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기해야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함. 따라서 미국의 강요에 따라 한미SOFA를 정지시키고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협정으로 시작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주한미

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방위비분담협정을 조속히 종료시켜야 함.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 자료

발 행 일	2014. 2. 21
발 행 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책임집필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담 당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02-711-7292 spark946@hanmail.net